



주간통일정세 2008-26(2008.06.23~06.29)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08-26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김정일, 방북 러 합창단 공연 관람(6/25,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방북 중인 러시아 국립아카데미 민속합창단의 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
 - 김 위원장은 알렉산드라 베르마코바 합창단 단장과 발레리 수히닌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의 영접을 받으며 극장에 도착해 합창단의 방북을 환영하고 단원들의 공연에 사의를 표하면서 그들과 대화도 나눴다고 조선중앙통신은 보도
 - 김 위원장은 이날 김기남 노동당 비서,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 현철 해·리명수 군 대장, 군 장병들, 군과 사회의 창작가·예술인들과 공연을 함께 관람했다고 통신은 언급
 - 그러나 통신은 김 위원장의 공연 관람 날짜와 장소는 밝히지 않음.

나. 정치 관련

- **‘핵 해빙’ 속 “우리식” 강조(6/27; 6/28, 우리민족끼리웹사이트)**
 - ‘우리민족끼리’는 냉각탑 폭파 당일인 27일 ‘우리 인민군대의 기질’이라는 글에서 “선군정치는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우고 그에 의거해 사회주의 건설을 다그쳐 나가는 정치방식”이라면서 “우리 인민군대는 집단주의 정신도 높고 조직성과 규율성, 단결력도 제일 강하다”고 주장
 - 매체는 28일에도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외세의 그 어떤 간섭과 전횡도 짓부수고 우리 식대로 조국의 부강번영을 이룩해나갈 수 있게 하는 자주적 정치”라면서 “남의 식대로 번영을 이룩하겠다는 것은 어리석은 망상”이라고 개방에 대한 거부감을 표출, 또 “제국주의 침략 세력이 자주화의 보루인 우리 공화국을 힘으로 억누르려고 온갖 군사적 침략 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고 있는 현실은 총대를 앞세우고 국방을 중시하는 선군정치를 실시하는 것을 절실한 과업으로 내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대외환경이 여전히 적대적이라고 주장
- **北 외무성대변인, 핵신고 관련 입장 보도(6/27,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7일 영변 핵시설의 냉각탑 폭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핵신고서가 “완전하고 정확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미국 정부의 테러지원국 해제 등 조치를 환영하면서 앞으로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9·19 공동성명을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보도



- **北, 핵신고-테러지원국 해제 침묵(6/26, 연합)**
 - 북한의 관영매체들은 26일 오후 10시 현재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핵신고와 미국 행정부의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에 대해 보도하지 않고 있음.
- **北, 美 적대정책 안버리면 전쟁억제력 강화(6/2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6·25전쟁 발발 58주년인 25일 6·25전쟁을 “미제가 도발한 침략전쟁”이라며 “미국이 대조선(대북) 적대시정책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전쟁억제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노동신문은 ‘내외전쟁세력의 도전을 짓부수고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실현하자’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미국은 “대조선 침략정책을 버릴 대신 새 세기에 들어선 오늘까지도 조선 정전협정을 난폭하게 짓밟고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무력증강과 합동군사연습 소동을 끊임없이 벌이고 있다”고 언급하고 “미국이 진실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란다면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버리고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우리 노력에 응해 나와야 한다”고 촉구
- **대미 회담·지원에 환상 갖지 말라(6/2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4일 ‘자력갱생은 우리의 생명이다’ 제목의 장문의 논설에서 미국을 직접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제국주의자들”, “외세” 등의 표현을 써가며 “우리가 강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 외세에 의존해 무엇을 해보겠다는 것은 강국 건설 자체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며 국제사회의 지원이 결코 선의에 따른 것이 아님을 거듭 강조
 - 신문은 미국의 식량지원 등을 의식한 듯 “정치군사적으로 예측하지 못한 나라들을 원조나 인도주의적 지원의 공간을 이용해 거머쥐려는 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상투적인 수법”이라며 “제국주의자들이 세계 도처에서 내흔들고 있는 돈주머니는 인민들의 자력정신을 마비시키는 마약”이라고 비난, 미국 등 국제사회의 지원에 대해 강한 경계심을 표출
- **향군 6·25만화 배포에 南정부 비난(6/2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재향군인회의 ‘6·25전쟁 바로알리기’ 만화가 각급 학교에 배포되고 있는 것은 남북대결을 고취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묵인하에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
 - 신문은 ‘북남대결을 고취하는 유치한 망동’ 제목의 논평에서 “극우보수단체인 재향군인회가 만들어 내돌린 ‘6·25전쟁 바로알리기’라는 만화책은 극히 반동적인 선전물”이라며 “더욱이 용납할 수 없는 것은 6·15통일시대에 이룩된 북남협력사업이 ‘북의 체제유지’에 이용된다고 악의에 차서 증상하는 사실”이라고 언급



- **한약재 이용 항암제 개발(6/28, 통일신보; 6/29, 우리민족끼리웹사이트)**
 - 조선동방즉효성약물센터에서 최근 인삼과 오가피를 비롯한 한약재로 '동방항암소'라는 항암제를 개발했다고 통일신보 최근호(6.28)가 보도, 동방항암소는 한창 진행 중인 중기암이나 말기암을 치료하고 재발과 전이를 막는 우수한 건강보조식품형 암치료라고 주장

- **평양 성화봉송 기념우표 발행(6/28, 통일신보; 6/29, 우리민족끼리웹사이트)**
 - 조선우표사가 지난 4월 28일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평양에서 진행된 베이징올림픽 성화봉송을 기념한 우표를 발행했다고 통일신보 최근호(6.28)가 보도

- **평양 유럽식 레스토랑 '다국어 서비스' 실시(6/28, 조선신보)**
 - 평양의 이탈리아·스위스 요리 전문점인 '별무리'가 유창한 외국어 서비스로 호평받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28일 소개, 제과점과 레스토랑을 겸한 유럽풍의 이 식당은 2005년 6월 스위스 유통업체와 단체의 지원을 받아 평양 고려호텔 인근 창광거리 련화동에서 오픈, 식당을 찾는 외국인 고객들의 모국어로 요리법과 기술을 친절하게 설명하여 외국인들을 감동케하는 서비스를 제공

- **北, 장마 예·통보 체계 강화(6/27, 조선신보)**
 - 2007년 여름 최악의 수해로 큰 피해를 입은 북한이 장마철을 맞아 "경보(警報)위원회"를 조직하고 "예보통보 체계"를 확립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로 피해 예방 및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 **생활한복 치마 10cm 짧게 디자인(6/27, 조선신보)**
 - 경공업성 피복연구소에서 "현시대적 미감과 계절적 특성에 맞는" 각종 여성 한복 도안을 창작했으며, 생활한복의 치마 길이를 10cm 정도 짧게 디자인 한 것이 특징이라고 조선신보가 보도

- **北유치원, 바둑 교육열(6/26, 조선신보)**
 - 북한 유치원에서 지능발달을 위한 바둑교육 열기, 조선신보는 26일 오는 8월 평양에서 '어린이 바둑경기 대회'가 열린다며 "조선(북한)의 유치원에는 체계적인 바둑교육을 실시하는 단위들이 적지 않다"고 설명

- **제6차 국제과학기술도서전 폐막(6/25, 조선중앙통신)**
 - 제6차 평양 국제과학기술도서전람회가 25일 3대혁명전시관에서 폐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北식량난 악화로 탈북시도 증가(6/25, 연합; 153호 오늘의 북한 소식)**
 - 북한의 식량난이 극심해지면서 북송동포나 여성들의 탈북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대북 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이 25일 주장, 단체는 소식지 153호에서 “최근 들어 귀국자(북송교포) 가족들이 탈북을 시도하다가 붙잡히는 사례가 늘자 보위부는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며 “귀국자들의 여행증을 취급할 때 보다 철저히 심사하며, 될 수 있으면 비준 증명서를 내주지 않는다”고 전언

- **北교향악단 연주에 외국인 절찬(6/25, 연합)**
 - 미국과 영국 공연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국립교향악단이 인민군 합창단인 ‘공훈국가합창단’과 함께 ‘외국인, 해외동포들을 위한 특별음악회’를 마련해 찬사를 받았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 **장마대비 수력발전시설 일제점검(6/25, 조선중앙방송)**
 - 전력공업성이 장마철에 대비해 북한 전역의 수력발전 시설에 대한 점검을 벌이고 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5일 보도

- **北에도 ‘웰빙 운동화’ 등장(6/25,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25일 평양 류원신발공장에서 “중전보다 가벼운 새형(신모델)의 운동화”를 만들었다며 주 소비층으로 “노인들을 상정”하고 있다고 보도, 공장 측은 시제품 사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색깔과 형태를 최종 결정한 뒤 대량생산에 들어가 북한의 정권 창건 60돌(9.9)에 즈음해 새 운동화를 주민들에게 공급할 예정

- **함북지역 수족구병으로 어린이 61명 사망(6/24, 연합; 152호, 오늘이 북한속시)**
 - 대북 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은 24일 북한의 함경북도 지역에 수족구병이 발병해 4월에서 6월까지 2~7세 어린이 61명이 숨졌다고 주장
 - 소식지 152호에서 함경북도 내에 어린이 사망자가 제일 많은 지역은 김책시로 22명이 사망했으며, 여타 지역의 경우 사망자 수는 청진시 17명, 회령군 10명, 무산군 12명으로 집계됐다고 전언

- **평양 전차궤도 중앙서 인도쪽으로 이전(6/24, 조선신보)**
 - 평양에서 도로 포장과 함께 보다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궤도전차 개보수가 한창, 조선신보는 24일 “시민들의 편의 보장을 위해” 궤도전차 노반을 교체하고 노선 위치까지 변경하고 있다고 보도
 - * 평양 궤도전차는 1989년 김정일 당시 노동당 비서의 지시에 따라 1990년 만경대 송산주차장에서 사동구역 송신주차장까지 20km에 이르는 제1노선을 건설하기 시작한 이래 현재 4개 노선이 운행 중인 것으로 알려짐.



- **평양서 국제과학기술도서전 개막(6/23, 조선중앙통신)**
 - 제6차 평양국제과학기술도서전람회가 23일 3대혁명전시관에서 개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전람회 조직위원장인 북한의 문재철 대외문화연락위원회 위원장 대리는 개막연설에서 “이번 전람회가 나라와 민족들 사이의 이해와 신뢰, 친선과 협조를 도모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 개막식에는 최태복 노동당 중앙위 비서와 북한의 교육·출판분야 종사자, 과학자, 북한 주재 국제기구 및 각국 대사관 관계자가 참석
 - 6월 25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람회에는 10여 개국과 국제기구 등에서 30여 개 단체가 참가하며 정보기술(IT), 나노기술(NT), 전자공학, 유전자공학, 환경학, 기초과학, 의학 등 분야의 최신 과학기술도서들이 전시
 - * 북한은 2001년 10월 평양에서 각국의 선진 과학기술을 소개한 도서전람회를 처음 개최한 이후 매년 국제도서전을 개최

- **평양 제외 시외전화 금지(6/23, 연합; 151호, 오늘의 북한소식)**
 - 북한은 6월 15일부터 평양시를 제외한 전국 각지의 가정에서 시외전화를 일절 금지하고 있다고 ‘오늘의 북한소식’ 제151호에서 언급, 이 단체는 “오직 체신소를 통해서만 시외전화가 가능한데 체신소에서 전화를 하면 통화 지역, 횟수, 시간 등이 기록되고 도청 가능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전언

2. 대외정세

가. 6자 회담관련

- **北, 영변원자로 냉각탑 폭파(6/27, 연합)**
 - 북한이 27일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을 폭파하는 이벤트를 실시, 폭파 장면은 CNN 등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

- **北, 핵신고서 중국에 제출(6/26, 연합)**
 - 북한이 26일 핵프로그램 신고서를 북핵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 중국 외교부는 이날 오후 5시(이하 현지시간)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또 미국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절차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 북한 관리는 이날 오후 2시30분(현지시간) 중국 외교부에 도착해 관련서류를 6자회담 중국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에게 핵신고서를 제출



나. 북·미 관계

- **美, 北 지정후 20년만에 테러지원국 해제 착수(6/26일, 연합)**
 -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26일 북한이 핵신고 약속을 뒤늦게나마 이행하자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북한을 앞으로 45일 이내에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겠다고 언급, 이에 따라 북한은 핵신고에 따른 검증 과정에서 충실하게 협력을 하면 오는 8월1일 테러지원국 명단의 굴레에서 (1988년 1월) 지정된 이후 20년 7개월여 만에 벗어날 수 있게 됨.
- **北, 교향악단 英보다 美공연에 더 관심(6/26,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당국은 애초 9월말로 예정된 국립교향악단의 영국 공연 보다는 10월 초 추진설이 나오고 있는 미국 공연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6일 런던 주재 북한 대사관이 “(국립교향악단의) 당초 9월 영국공연을 적극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본국(북한 정부)에서는 미국 공연에 더 큰 관심을 쏟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고 영국 의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

다. 북·중 관계

- **北·중국과 전 분야에서 협력 강화 다짐(6/26, 연합)**
 - 북한은 25일 중국과 모든 분야에서 우호와 협력을 강화할 것임을 다짐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 김영일 외무성 부상은 이날 평양주재 중국대사관에서 열린 리셉션에서 북·중 우호와 협력은 이 복잡한 세계에서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언

라. 북·일 관계

- **일본 후쿠오카현 일·조우호협회 대표단(6/27, 조선중앙TV)**
 - 기타하라 마모루 대표를 단장으로 한 일본 후쿠오카현 일·조우호협회 대표단이 26일 평양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
- **北, 북일관계 정상화 양국 이익에 부합(6/23,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3일 “조(북)일관계를 정상화하고 두 나라 사이 선린 우호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두 나라 인민의 염원과 이익에 맞는다”며 북·일 관계정상화의 당위성을 부각
 - 통신은 또 북일 국교정상화 실무회담에서 일련의 합의가 이뤄진 데 대해 “국제사회는 조일관계를 두 나라 인민들의 공동의 이익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해결할 수 있는 전망이 열린 것으로, 관계개선의 돌파구가 마련된 것으로 평하고 있다”면서 “조일관계 개선은 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며 일본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



- 통신은 “특히 두 나라 관계정상화를 실현하는 것은 6자회담 공동문건이 규정한 내용”이라며 “조선반도 비핵화 과정이 일정한 전진을 가져오고 있는 상태에서 일본이 우익세력의 주장대로 우리와 대결을 계속 고집한다면 6자회담에서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몰리던 신세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주장

마. 기타외교 관계

● 최태복 의장, 베트남대표단 면담(6/27, 조선중앙통신)

- 최태복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2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크쓰르 프억 베트남 인민회의 민족이사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베트남·조선(북) 친선의원단 대표단을 면담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북한주재 인도대사와 대사관 직원들 친선노동(6/27, 조선중앙통신)

- 질레 싱 인도대사와 대사관 직원들이 27일 평안남도 남포시 소재 조선·인도친선 갈천협동농장에서 친선노동을 하고 지원물자를 제공

● 北·캐나다와 영어교육 협력 강화(6/27,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에서 영어 교육이 강조되면서 캐나다에 유학하는 학생과 연수를 받는 학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토론토에 북한 영어교원(교사)들을 위한 영어강습소 설립을 제안하는 등 캐나다와 영어교육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7일 보도
- 캐나다 내 북한 유학생은 2003년 이전에 5명 미만이던 것이 2004년 10명, 2005년 5명, 2006년 14명 등으로 점차 늘고 있는 추세, 이민국의 노리스 공보관은 “통계에 파악된 북한 유학생들은 중국 내 캐나다 영사관을 통해 학생비자를 발급받았거나 중국에서 학생비자를 받은 후 캐나다에서 비자 기한을 연장한 경우만을 반영하고 있다”며 “이들은 조총련 계열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 북한인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언급
- RFA는 또 최근 북한의 학자나 전문가들이 비영리 영어교육기관인 캐나다 영어연구학회(ELIC)의 초청으로 캐나다 밴쿠버 인근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연수를 받고 있다고 보도

● 유럽연합(EU)의 유럽의회 한반도관계 담당 분과대표단 평양 출발(6/24, 조선중앙통신)

- 후버트 피르커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유럽연합(EU)의 유럽의회 한반도관계 담당 분과대표단이 방북일정을 모두 마치고 24일 평양을 떠났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인민보안상, 베트남·라오스 방문(6/24, 조선중앙통신)

- 주상성 인민보안상을 단장으로 하는 인민보안성 대표단이 베트남과 라오스를 방문하기 위해 24일 평양을 출발



● **北외무상, 比여객선 사고에 위로전문(6/24, 연합)**

- 박의춘 외무상은 24일 여객선 ‘프린세스 오브 더 스타’호가 태풍으로 침몰한 사고와 관련해 알베르토 로물로 필리핀 외교장관에게 전문을 보내 위로

3. 대남정세

● **남북 언론단체 이메일로 첫 기사교류(6/27, 연합)**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는 정부 수립 이후 60년 만에 처음으로 남북 언론단체 사이에 전자우편(이메일)을 통한 기사교류가 성사됐다고 27일 발표, 남측 언론본부는 지난 20, 21일 두 차례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언론분과위원회로부터 논평 형식의 기사를 전자우편을 통해 전달받았다고 설명
- 앞서 남측 언론본부는 5월 초 북측 언론분과와 함께 금강산에서 제3회 남북언론인대표자회의를 열어 전자우편 기사교류 등 다양한 형태의 기사교류에 합의했었음.
- 북측이 보낸 기사는 남북관계에 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한 남측 언론보도에 대한 반론 성격의 논평 등 2건으로 북측이 보낸 기사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통일부에 북한 주민 접촉 신고를 해야 하고 남북 교류사업 승인 등도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며 당장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언급
- 남측 언론본부는 기사교류 사실을 24일 통일부에 신고

● **北, 개성공단 통행시간 축소(6/27, 통일부)**

- 북한이 6월 24일부터 오전시간대 개성공단에서 남측으로 복귀하는 인력과 물자의 통행을 허용치 않고 있다고 통일부가 27일 발표
-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은 21일 서해지구 군사실무 책임자 명의로 ‘통관·통행 검사의 복잡성을 피하기 위해 24일부터 서해지구에서의 모든 인원과 차량들의 복귀를 오후 시간(14시부터)에만 진행 되도록 계획해야 한다’고 통보해왔다”고 발표
- 이에 따라 오전 중 생산품 운반 등을 위해 개성공단에서 남측으로 돌아오는 공단 관계자들(하루 평균 70~80명)이 복귀를 오후로 미뤄야 하는 등의 불편을 겪고 있음.
- 이와 함께 남북간 통신선 이상으로 인해 개성공단 사업자들과 개성·금강산 관광객 등의 오전 방북도 10여일째 예정보다 최장 1시간씩 지연되고 있음. 이로 인해 매일 아침 수백명에 달하는 방북 인사들이 방북에 앞서 남측 출입사무소에서 40분~1시간 가량 대기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관광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음.
- 정부 관계자는 “통신장애가 실제로 존재하는 만큼 이미 북한에 팩스 등 일부 장비를 제공했으며 7월 중순까지는 북측에 광케이블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中 외교부장, 6자회담 곧 개최 시사(6/29)

-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이 29일 오후 베이징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차기 6자회담이 조만간 개최될 것임을 시사했음. 양 부장은 양국 외무장관 회담에 이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의 신고가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하고 차기 6자회담이 곧 개최될 것임을 내비쳤음.
- 라이스 장관은 중국에 제출된 북핵 프로그램 신고서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차기 6자회담에서 구체적인 검증 절차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음.
- 또 라이스 장관은 ‘반쪽 선거’를 밀어부쳐 정권 유지에 성공한 짐바브웨의 로버트 무가베 정권에 대해 더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중국 측에 촉구했으나 양 부장은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중미간 입장차를 드러냈음.
- 회담에 앞서 양 부장은 “중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국민들이 보내준 애도와 지원에 깊이 감사하고 있다”면서 라이스 장관의 쓰촨성(四川)성의 청두(成都) 방문에 대해서도 사의를 표명했음.
- 라이스 장관은 26일부터 28일까지 일본에서 열린 G-8(선진7개국+러시아) 정상회의 장관급 회담에 참석한 뒤 방한해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과 회담을 갖고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한 뒤 29일 중국을 찾았음.

● “내달 둘째주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 추진” <교도통신> (6/29)

- 북한이 지난 26일 북핵 프로그램 신고서를 제출한 가운데 7월 둘째주 중에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29일 소식통을 인용, 보도
- 이번에 열리는 6자회담 수석대표회담에선 북한 핵신고서에 대한 검증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6일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북핵 신고서를 제출했으며, 이에 맞춰 미국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절차에 착수했으며, 대북 적성국 교역법도 27일부로 폐지했음. 또 북한은 27일 영변 핵시설의 중요한 시설 가운데 하나인 냉각탑을 폭파·해체했음.

● 성 김 “부시 임기내 북핵 3단계 완수도 가능” (6/29)

- 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은 28일 부시 행정부 임기내에 북핵 3단계



목표를 완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영변 핵시설의 냉각탑 폭발현장을 지켜보고 한국을 방문한 성 김 과장은 이날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 시점에서 어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 미 국무부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회견문에 따르면 그는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북핵보고서를 검증하고, 다음 단계이자 마지막 단계인 비핵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6자회담의) 다른 당사국들과 협력한다면 그 과제(3단계)를 완수할 가능성도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 성 김 과장은 영변 냉각탑 폭발에 소요된 비용을 미국이 부담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불하지) 않았다. 북한이 불능화를 위한 행동을 취한 뒤 항목별로 정리한 청구서를 제출하면 우리는 검토 후 사실과 부합하면 지불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 “北, 2006년 핵실험에 플루토늄 2kg 사용”(6/29)

- 북한은 지난 26일 중국에 제출한 핵 신고서에서 약 30kg의 플루토늄을 추출했으며, 2006년 10월 실시한 핵실험에 2kg을 사용한 것으로 진술했다고 6자회담에 정통한 소식통이 28일 밝혔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추출한 플루토늄 외에도 8kg의 미추출 플루토늄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또 핵시설의 장비 내에 남아있는 플루토늄까지 합산하면 추출한 플루토늄의 전체 분량은 44kg으로 늘어남. 핵무기 1개에는 통상 4~8kg의 플루토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美, 北냉각탑 폭발비용 250만달러 제공”<NYT>(6/28)

- 미국은 북한 영변핵시설 냉각탑 폭발 비용으로 250만달러를 제공했다고 뉴욕타임스지가 27일 보도. 신문은 협상에 참여한 수 명의 미국 관리들을 인용, “북한 관리들은 냉각탑 폭발 비용이 500만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으며 미국은 250만달러를 제공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워싱턴의 강경파들은 미국 정부가 제공한 250만달러가 너무 많은 것으로 비판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 톰 케이시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미국이 냉각탑 폭발 비용으로 북한에 얼마를 줬느냐는 질문에 “폭파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술적 협의가 있었다는 것은 알지만, 금전적 지원이 있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을 피했음.

● “北, 플루토늄 약 40kg 신고”<CNN>(6/27)

- 북한은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한 핵프로그램 신고서에서 플루토늄 추출량을 약 40kg으로 신고했다고 CNN 방송이 27일 보도
- CNN은 미 국무부를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북한이 신고한 플루토늄 양은 핵무기 7개 정도를 제조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전날 제출한 핵신고서는 60쪽 분량으로, 신고내용은 영어로 기술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냉각탑폭파> 러 외무부 “실질 조치에 환영”(6/27)

- 러시아 외무부는 27일 북한이 영변 핵 시설 내 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표명했음. 6자회담 당사국이기도 한 러시아는 성명에서 “우리는 이번 조치를 환영하며 한반도 비핵화 실현이라는 궁극적 목표 달성을 위한 첫 실질적 조치 중 하나로 간주한다”고 밝혔음.

● <냉각탑 폭파> 라이스 “불능화를 위한 걸음”(6/27)

-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27일 북한 핵개발의 상징물인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이 폭파되는데 대해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수 개월간 노력해 온 불능화를 위한 걸음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음.
- G8(서방8개국 모임)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을 방문중인 라이스 장관은 “북한을 ‘플루토늄 사업’에서 손떼게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냉각탑 폭파의 의미를 거듭 강조한 뒤 “하지만 이것이 이야기의 끝은 아니다”고 말했음.
- 냉각탑 폭파 현장을 지켜보기 위해 영변을 방문한 성 김 국무부 한국과장도 “이는 핵불능화 과정의 중요한 걸음이며, 이로써 우리는 다음 단계(북핵 3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서게 됐다”고 말했음. 성 김 과장은 냉각탑이 순식간에 무너진 후에 북한관리들과 악수를 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 獨언론 “북한 핵프로그램 단계적 매각 의사”(6/27)

-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매각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독일 일간지 쥐트도이체 차이퉁이 27일 보도
- 이 신문은 ‘악의 추과의 작별’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북한이 핵 신고서를 제출하고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절차를 시작한 것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음.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지난 2001년 클린턴 행정부 당시 이룩했던 지점에 다시 도달한 것에 불과하며 따라서 축배를 들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음.

● 靑 “냉각탑 폭파, 북핵진전 상징적 의미”(6/27)

- 청와대는 27일 북한이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을 폭파한 것과 관련, 북핵 문제의 진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음.
- 전날 핵 신고서 제출에 이은 냉각탑 폭파로 인해 6자회담의 최종 목표인 한반도 비핵화에 한발 다가선 것으로 의미를 부여하며 긍정 평가한 것.



-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공식 논평을 통해 “우리 정부는 오늘 냉각탑 폭파에 대해 북한 당국의 핵 불능화 의지를 정치적,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조치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 성 김 국무부 한국과장 평양 도착(6/27)

- 미 국무부 성 김 한국과장이 북한의 영변핵시설 냉각탑 폭파 현장에 참석하기 위해 26일 평양에 도착. 평양에 도착한 성 김 과장은 이번 방북 목적이 “북한 관리들을 만나고 냉각탑 폭파 현장에 참석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 김 과장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폴 해늘 국장과 함께 서울에서 판문점을 경유해 평양으로 이동했음. 김 과장은 평양으로부터 90km 떨어진 영변핵시설에서 27일 오후 이뤄지는 냉각탑 폭파 현장에 참석한 뒤 28일 귀환

● 라이스 “대북외교 효과...영원한 적은 없다”<WSJ>(6/26)

-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26일 북한의 핵 신고는 6자회담을 통한 외교적 노력이 효과를 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북한이 협력하면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관계 개선을 이룰 수 있고 미국에 영원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 라이스 장관은 그러나 북한이 속이면 가능한 모든 제재를 다시 부과하고 새로운 제재도 추가할 것이라고 경고했음. 라이스 장관은 이날 북한의 핵 신고가 이뤄지기 전에 월스트리저널(WSJ)에 ‘대북 외교가 효과를 내고 있다’는 제목으로 기고한 글에서 북한의 핵 신고는 비록 초기이지만 중요한 걸음이고 미국은 완전하고 정확한 검증을 요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 라이스 장관은 북한 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다루면서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 개발 노력을 더 많이 알아가고 있고 외교정책이 북한의 핵 무기와 프로그램을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제거하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최선의 선택이라는 2가지를 명심해야 한다고 외교적 노력의 중요성과 성과를 강조했다.

● <북핵신고> 日, 핵포기 향한 ‘중요한 일보’로 평가(6/26)

- 일본 정부는 북한이 26일 핵개발 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것을 핵무기 포기를 향한 ‘중요한 일보’로 평가하면서 앞으로 미국 등 6자회담 참가국들과 협력해 신고 내용을 철저히 검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일본은 그러나 미국이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 납치문제 해결에 필요한 중요한 대북 압박카드가 사라지게 된 점에 대해서는 미국과 긴밀한 협력으로 북한에 납치문제 해결을 계속 촉구해 나갈 방침임.
- 마치무라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계획 신고에 대해 “최종 목표인 핵무기의 포기를 향한 걸음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일본도 6자회담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정밀 검증작업에 가담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도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에 따른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에 대해 “비핵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철저히 검증해 나갈 것”이라며 신고 내용의 검증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 러 언론 “한반도 비핵화 실현 진전 기대”(6/26)

- 러시아 언론 매체들은 26일 북한의 핵 신고서 제출 소식을 일제히 보도하면서 향후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큰 진전이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 리아 노보스티 통신은 이날 북한이 10.3 합의사항에 따라 핵 프로그램 신고서를 북핵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했다고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부부장의 발표 내용을 인용, 보도했다. 또 핵 신고서 제출 직후 미국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명단과 적성국 교역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는 미 국무부 발표 소식도 함께 전했다.
- 리아 노보스티는 앞으로 6자회담 틀 내에서 북한 핵 시설에 대한 통제가 이뤄질 것이고 북한에 대한 추가 경제 지원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 中, 북한 핵신고서 제출 공식 확인(6/26)

- 중국 외교부는 26일 북한이 북핵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핵신고서를 제출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이날 최진수 주중 북한대사가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에게 핵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 이에 앞서 우 부부장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이 26일 ‘10.3’ 합의 정신에 따라 핵신고서를 의장국에 제출하고, 미국도 이날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고 적성국교역법 적용을 중단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 그는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한이 제출한 핵신고서를 검증하기로 합의했으며 참가국들은 내부적으로 검증 체계 수립을 이끌어내기 위한 원칙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 우 부부장은 이어 “6자회담 참가국들은 모니터링 기제를 수립해 6자회담 틀안에서의 핵확산 방지와 경제 에너지 지원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지를 감독하기로 합의했다”며 “6자회담 참가국들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한다는 목표를 담은 2005년 9.19 공동성명의 내용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진전들이 “전면적이고 균형적인 2단계 행동의 실현에 도움이 되고 9.19 공동성명의 목표를 최종적으로 실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 **美 “北 핵신고 하면 테러지원국 신속 해제 가능”(6/26)**

- 미 행정부는 25일(현지시간) 북한이 핵프로그램 신고를 하면 미국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기 위한 상응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톰 케이시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핵 신고서가 이르면 내일 제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신고서가 제출되면 곧바로 북한을 적성국교역법 제재에서 해제한다는 성명과 더불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다는 미 행정부의 입장을 의회에 통보하는 내용의 성명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케이시 부대변인은 이어 북한의 핵신고서 제출과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는 ‘단계적(step-by-step)’ 과정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신의있는 행동에 상응한 신의있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는 동시에 점진적인(incremental) 과정이기도 하다”면서 “북한이 더 이상 테러지원국 명단에 오르지 않게 되고, 적성국교역법 제재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북한은 여전히 유엔결의안과 양자간 조치에 따라 경제 및 기타 여러가지 제재 하에 놓이게 돼 있다”고 지적했음.
- 이와 관련, 데이너 페리노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이 핵신고서를 제출하면 (부시) 대통령과 (라이스) 국무장관이 언급했던 대로 우리는 신고서를 엄격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말하고 “북한이 핵신고서를 제출하면 그들은 우리와 약속한 대로 영변 핵시설을 불능화하고 해제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원했던 한반도의 비핵화에 근접하게 된다”고 밝혔음. 페리노 대변인은 “또한 그렇게 되면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 (북미) 관계정상화, 동북아에서의 평화·안보를 위한 새로운 메커니즘 구축 등의 목표에 진전을 이루게 되는 것은 물론 굶주림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북한 주민들의 삶을 증진시키는 기회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음.

● **北 HEU 의혹관련 증거 美 새로운 우려로 떠올라<WSJ>(6/24)**

- 북한이 26일 핵프로그램 신고서를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고농축 우라늄(HEU)을 활용한 2번째 핵무기 개발프로그램을 추진했을 수 있다는 증거들이 발견돼 미국의 새로운 우려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
- 신문에 따르면 미 정부 관계자들은 지난달 북한이 미국에 넘겨준 1만 8천쪽 분량의 영변 원자로 운영기록 자료가 우라늄 입자의 흔적으로 오염돼 있음을 발견했다고 말했음. 이는 이 자료들이 우라늄 농축 활동이 이뤄진 시설에 보관돼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 **힐 “이번 핵신고에 핵무기는 제외”(6/24)**

-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무기문제는 후속 국면에 결정될 일”이라며 “현 시점에서 신고는 핵 물질 전부, 핵시설과 프로그램들 전부를 담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베이징의 미국대사관 대변인이 전했다.

- 힐 수석대표는 이어 “현 국면은 아니지만, 북한도 무기문제를 논의해야만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힐은 또 전날 백악관이 언급한 대로 북한의 핵 신고는 오는 26일이 우리의 목표 시한이라며 “(북한이 제공한) 핵분열성 물질의 양을 입증하는 데는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음.

● 日외상 “美, 北 핵신고 동시에 테러국 해제 착수”(6/24)

- 미국은 오는 26일까지 북한이 핵계획 신고를 마치면 거의 동시에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고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일본 외상이 24일 밝혔다.
- 마치무라 노부타카(町村信孝) 관방장관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생각하면 지정 해제를 의회에 통고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일본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며 핵신고와 테러지원국 해제 착수가 동시에 이뤄질 것임을 시사

● 김 숙 ‘北도 6자회담 조속 재개 동의’ 시사(6/23)

- 북핵 6자회담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 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3일 6자 수석대표 회동 재개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베이징에서 한·미, 한·중 수석대표 회동을 가진 뒤 이날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 기자들과 만나 “중국이 아직 6자 수석대표 회동 날짜를 정하지 못했다”면서 “(베이징에서) 조만간 열릴 수 있도록 최종 조율을 했으니 중국이 적절한 날짜를 선정해 참가국에게 회람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그는 ‘6자 수석대표 회동을 조만간 연다는데 반대하는 나라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없는 것 같다”고 말해 북한도 조속한 회담 재개에 동의하고 있음을 시사. 김 본부장은 조만간 개최될 수석대표 회동에서는 “신고서 내용에 대한 논의와 신고서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검증, 그리고 2단계(핵신고 및 불능화)를 마무리하고 3단계(핵폐기)로 진입하는 문제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소개했음.

나. 미·북 관계

● “北 인구조사 준비 순조”<UNFPA>(6/28)

- 오는 10월로 예정된 북한의 인구조사 준비 작업이 잘 진행되고 있으며 식량난의 이유로 늦춰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버나드 코클린 유엔인구활동기금(UNFPA) 중국사무소장의 말을 인용해 28일 보도



- 코클린 소장은 이 방송과 인터뷰에서 홍콩, 필리핀, 캄보디아, 중국 등에 파견돼 지난 몇달간 인구조사를 위한 연수를 받았던 북한 관리들이 조사를 3개월여 앞두고 모두 돌아갔으며 현재 현장조사 요령 등 인구조사 준비사항을 종합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북한의 인구조사는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14만명의 조사요원들이 전역의 모든 가구를 방문해 조사표를 작성하고 10명의 국제요원이 관찰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최종 결과는 자료분석 시간을 감안할 때 1년 뒤인 내년 10월께 나올 예정. 유엔은 현재 북한의 인구를 2천 27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음.

● WFP “北동북부에 기근 초기징후” 예비평가<VOA>(6/28)

- 세계식량계획(WFP)은 북한 동북부 지역에 기근 초기징후가 있지만 극심한 식량난을 겪었던 1990년대보다는 상황이 양호하다는 예비평가를 내렸다고 미국의 소리(VOA)방송이 28일 글린 포드 유럽의회 의원의 말을 인용해 보도
- 지난 21~24일 북한을 방문했던 포드 의원은 이 방송과 전화통화에서 “식량 수요조사를 통해 북한의 일부 지역, 특히 동북부 도시 지역에서 기근 초기징후들이 발견됐다는 예비평가가 나왔다”며 “WFP 측은 기근의 초기 징후들이 무엇인지 자세한 예를 들지는 않고 다만 어린이들이 영양결핍 상태에 있고 주민들이 식량부족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WFP는 식량농업기구(FAO), 유엔아동기금(UNICEF)과 함께 지난 11일부터 함경도, 량강도 등 북한의 8개 지역 53개군 560가구를 대상으로 식량수요 조사를 진행 중임.

● “WFP-北, 식량지원사업 연장키로”<RFA>(6/27)

- 오는 8월 말로 시한이 만료되는 세계식량계획(WFP)의 대북 식량지원사업 연장을 위한 북한과의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조만간 양측이 합의서에 공식 서명할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7일 보도
- WFP는 대북 구호복구사업 일환으로 2006년 4월부터 아동과 임산부 등 북한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식량을 지원해왔고 현재 북한의 50개 군, 100만명이 수혜 대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 RFA는 북한이 당초 식량분배 감시요원의 증가 요구를 이유로 협상을 지연시켰던 WFP와의 식량지원 연장 협상에서 융통성 있는 자세를 보여 협상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며, 합의서에는 북한 전역에 19개가 운영되다가 2005년 대북지원 축소로 9개만 가동되고 있는 식품가공공장의 재가동 복원과 지역사무소의 수를 늘리는 방안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 美 “北 핵실험·확산·인권침해 제재는 계속 남아”(6/27)

- 미 행정부는 26일 북한이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되고 對北 적성



국교역법이 폐지되도 북한의 핵실험과 대량살상무기(WMD)확산·인권침해 등과 관련된 제재는 다른 법과 규정에 따라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와 관련 조지 부시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해제 방침 및 대북 적성국교역법 폐지를 발표하면서 ‘북한과 북한국적자 관련 일부 제재 유지에 관한 행정명령’을 아울러 발표했다.
-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대통령의 6.26 조치는 대북 적성국교역법의 적용을 효과적으로 해제하지만, 대부분의 대북 적성국교역법에 근거한 제재조치들은 이미 지난 2000년에 해제됐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상징적”이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뿐만 아니라 국무부는 “지난 2006년 10월9일 북한의 핵장치 폭발실험, 핵확산활동, 인권침해 등과 관련된 다른 제재들은 다른 법과 규정에 근거해 계속 남게 될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미국의 대북제재가 완전히 해제된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 또 부시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을 통해 대북 적성국교역법 폐지에도 불구하고 계속 남게 될 교역 관련 대북제재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지난 2000년 6월16일을 기준으로 그동안 차단됐던 북한 및 북한국적자의 모든 재산과 재산상의 이해관계는 계속 차단되며 (북한에) 이체·지불·수출·철회되지 못함.

● 부시 “對北 적성국교역법 27일 0시1분 폐지”(6/26)

-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26일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서 제출에 맞춰 테러지원국 지정해제 절차 착수와 함께 북한에 적용해온 적성국 교역법을 오는 27일부터 폐지한다고 선언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북한에 대한 적성국교역법 적용 종료 선언’을 통해 그동안 북한에 대해 행사돼온 적성국 교역법을 종료하며 “이 선언은 미 동부시간으로 2008년 6월27일 오전 0시1분 발효된다”고 밝혔다.
- 부시 대통령은 이날 선언에서 “대북(對北) 적성국교역법 등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더는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외국자산통제규정과 교역통제 규정, 대통령 결심 2007-32 등에 의해 이행돼온 북한에 대한 적성국교역법 적용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시 대통령은 헨리 폴슨 재무장관에게 이 폐지선언이 효력을 발휘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고 권한을 위임했다.

● 라이스 “방북 검토 시기 아니다”(6/26)

- 일본을 방문중인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26일 북한의 핵 신고에 이은 테러지원국가 지정 해제와 관련, “일본인 납치 문제라는 우려는 남겨져 있다”고 밝혔다고 교도(共同)통신이 전했다. 라이스 장관은 그러나 자신의 방북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할 시기는 오지 않았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 주요 8개국(G8) 외무장관 회의 참석차 교토(京都)시에 머물고 있는 라이스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런 (납치문제라는) 아주 중요한 인도적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의 동맹국인 일본에 대해 북한이 진지하게 대응하길 기대한다”고 말해 향후 북한에 대해서도 일본인 납치 문제 진전을 촉구할 방침임을 내비쳤음. 라이스 장관은 “이것은 중요한 최초의 한 걸음”이라고 핵프로그램 신고의 의미를 강조했다.

● “北, 교향악단 英보다 美공연에 더 관심”<RFA>(6/26)

- 북한당국은 애초 9월말로 예정된 국립교향악단의 영국 공연 보다는 10월 초 추진설이 나오고 있는 미국 공연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6일 런던 주재 북한 대사관이 “(국립교향악단의) 당초 9월 영국공연을 적극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본국(북한 정부)에서는 미국 공연에 더 큰 관심을 쏟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고 영국 의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

● “부시-김정일, 베이징 올림픽서 조우할 수도”<WP>(6/25)

-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오는 8월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할 예정인 가운데, 부시 대통령과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 때 조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25일 보도

- 포스트는 이날 백악관 데이너 페리노 대변인이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부시 대통령이 오는 8월 열리는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힌 점을 언급, “베이징 올림픽에서 부시 대통령이 작은 북한 깃발을 흔들며 응원하는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조우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 北 “美 적대정책 안버리면 전쟁억제력 강화”(6/25)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6.25전쟁 발발 58주년인 25일 6.25 전쟁을 “미제가 도발한 침략전쟁”이라며 “미국이 대조선(대북) 적대시정책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전쟁억제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노동신문은 이날 ‘내외전쟁세력의 도전을 짓부수고 조선반도의 공명한 평화를 실현하자’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미국은 “대조선(대북) 침략정책을 버릴 대신 새 세기에 들어선 오늘까지도 조선정전협정을 난폭하게 짓밟고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무력증강과 합동군사연습 소동을 끊임없이 벌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 중·북 관계

- <북핵신고> “시진핑 부주석 적극적 중재역할해” <홍콩 신문> (6/27)
 - 북한 핵폐기의 돌파구를 마련한 핵 프로그램 신고에는 최근 북한을 방문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부주석이 시의적절한 중재역을 맡은 것으로 보인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27일 보도
 - 미국이 북한의 핵신고에 결정적 역할을 맡긴 했지만 시 부주석이 지난 18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2.13 합의’를 이행토록 시의적절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임.
- 北, 중국과 전 분야에서 협력 강화 다짐(6/26)
 - 북한은 25일 중국과 모든 분야에서 우호와 협력을 강화할 것임을 다짐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 북한 김영일 외무성 부상은 이날 평양 주재 중국대사관에서 열린 리셉션에서 북-중 우호와 협력은 이 복잡한 세계에서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 부상은 북-중이 내년에 수교 60주년을 맞는다고 말하고 북한은 중국과의 전방위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류샤오밍(劉曉明) 중국대사는 두 나라가 발전의 호기를 맞고 있다며 중국은 양국 우호·협력 관계 발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화답했음.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부주석은 지난 17일부터 사흘간 평양을 방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하는 외에 양국간 교역, 운송, 항공 등의 협정을 체결했음.

라. 일·북 관계

- 日 관방장관 “北 핵신고 검증에 일본도 참가”(6/27)
 - 일본의 마치무라 노부타카(町村信孝) 관방장관은 27일 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신고함에 따라 일본도 6자회담 참가국의 일원으로서 “완전한 신고인 지에 대한 검증작업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음.
 - 마치무라 장관은 이날 각의후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완전한 신고가 아닌 것으로 드러날 경우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 결정이 철회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이 미국에 필요한 외교노력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확실한 신고와 함께 핵무기 폐기를 추궁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음.
 - 그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한 빨리 일북간에 방법을 합의하고 재조사에 착수할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수단이 테러지원국 지정은 아니다. 일본이 북한에 아무런 카드도 없는 것은 아니어서 필요한 카드를 활용해 해결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음.



마. 기타

● 佛외무 “북핵 폐기 진전시 외교관계 수립 용의”(6/26)

-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 핵무기 폐기와 관련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경우, 프랑스는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할 용의가 있다고 베르나르 쿠슈네르 프랑스 외무장관이 26일 밝혔다. 쿠슈네르 장관은 북한이 26일 중 핵신고서를 제출기로 예상되는 점을 환영하면서도 IAEA 전문가들이 내리는 결론을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쿠슈네르 장관은 일본 교토(京都)시에서 열리는 선진8개국(G8) 외무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모든게 희망대로 되고, IAEA가 최초로 긍정적인 결론을 내린다면 프랑스는 다음 단계를 고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방식으로 폐기하도록 촉구한 유엔안보리 결의안이 지난 2006년 10월 통과된 점을 거론하면서 “이번 신고가 이러한 방향으로 간다면 바람직한 것이며,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등 대북관계를 개선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李대통령 “한미, 모든 북핵 포기 긴밀협력”(6/28)

-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북한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핵프로그램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중인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지금까지 6자회담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유용한 틀이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 이 자리에서 라이스 장관은 북핵 포기과 검증 등 3단계에 진입한 6자회담 진전상황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측 노력을 평가하면서 북한의 핵 신고 내용 검증과 3단계 협상을 통해 북한이 모든 핵프로그램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부시 대통령 내외의 한국 방문이 조기에 성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라이스 장관은 다만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문제에 대해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한미 FTA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임기내 인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FTA가 올해 안에 인준될 수 있도록 미 의회 설득 노력을 계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 **라이스 “쇠고기 신뢰회복 기대...긴밀 협조”(6/28)**

-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28일 “미국은 쇠고기 문제의 새로운 조건에 대해 (한국과)합의를 이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이 문제에서 한국과)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 라이스 장관은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유명한 외교 통상부 장관과 회담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 공동의 목표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이라며 “(FTA 비준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 유 장관은 “한국 국민들이 30개월령 이상 소에 위험 요소가 있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인식을 불식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할 것”이라며 “소비자의 확신이 있을 때까지 30개월령 미만만 수입하기로 양국정부가 합의했기 때문에 합의사항 지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북핵 문제와 관련, 유 장관은 “북한의 신고서 제출이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중요한 시발점이라는 데 공감했다”며 “신고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검증 체계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를 위해 노력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 **한·미, 30일 군수협력위원회 개최(6/27)**

- 한국과 미국은 30일 워싱턴 미 국방부에서 제40차 한미안보협의회 군수협력위원회(LCC) 회의를 개최한다고 국방부가 27일 밝혔다.
- 이번 회의에서는 전시비축탄약 및 물자(WRSA) 이양과 탄약 비군사화 사업, 전시 미 탄약지원체계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됨. 국방부 관계자는 “WRSA 이양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실무선에서 논의된 내용을 점검하고 이양 방식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해 올해 10월 미국에서 열릴 안보협의회(SCM)에서 최종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그간 5차례 WRSA 이양 협상을 벌였지만 우리 측이 인수할 물량과 가격을 최종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한국에 비축된 WRSA는 구형 총·포탄에서 최신형 미사일에 이르기 까지 280여 종 60만t이며 비용으로 환산하면 3조원이 넘음. 또 탄약 비군사화사업과 관련해서는 미측의 장비제공 문제가 집중 협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 국방부 관계자는 “노후 탄약을 해체해 고철과 비료를 생산하게 될 탄약 비군사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미측에서 용융로와 비료화 시설이 도입돼야 한다”며 “이번 회의에서는 이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 미·중 관계

● 라이스 美 국무, 쓰촨 방문(6/29)

-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29일 쓰촨(四川)성의 성도인 청두(成都)방문을 시작으로 이틀간의 중국방문 일정에 들어갔음.
- 신화통신의 이날 보도에 따르면 쓰촨에서 라이스 국무장관은 지진피해가 컸던 두장옌과 이재민 임시거주지를 방문, 이재민들을 위로할 계획임.
- 라이스 국무장관은 이날 오후 베이징으로 이동해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 등 고위인사를 만나 북핵과 6자회담 일정 등 현안을 논의. 중국 외교부는 미 정부가 쓰촨에 100만달러의 현금과 160만달러의 물자를 제공했다고 밝혔음.

● 라이스 美국무 방중...북핵 현안 논의(6/29)

-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29일 오전 이틀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다음 행선지인 중국으로 출국했음. 라이스 장관은 이날 오전 7시30분께 특별기편으로 성남 서울공항을 출발, 중국으로 향했음.
- 라이스 장관은 중국에 30일까지 머물며 양제츠 외교부장 등 고위급 인사들과 만나 북한의 핵 신고 이후 6자회담 재개 등 북핵 현안을 비롯해 국제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
- 앞서 라이스 장관은 26일부터 28일까지 일본에서 열린 G-8(선진7개국+러시아) 정상회의 장관급회담에 참석한 뒤 28일 서울에 도착,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양국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핵신고서 내용 검증 방안 등 북핵 문제와 조지 부시 대통령의 방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 등 양국간 현안에 대해 협의했음.

● “美 등 전세계 전산망, 중국군 사이버공격 받아”(6/26)

- 중국군은 사이버전쟁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으며 전세계 각국의 전산망이 중국군의 소행으로 보이는 사이버공격을 받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미 국방부 고위관리가 25일 밝혔음.
- 중국군은 또 항공모함 연구·설계프로그램을 진행하고, 10여종의 탄도미사일을 개발중이거나 이미 실전 배치했으며 최신예 러시아제 전투기 및 중국이 자체 개발한 최신 F-10 전투기의 비율을 높이는 등 군사력 증강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고 이 관리는 지적했음. 제임스 신 미 국방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이날 미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 출석, 이 같이 언급하며 중국 군사력 증강을 둘러싼 우려를 나타내고 중국의 군사비 지출에 대한 투명성과 미·중간 군사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신 차관보는 증언에서 “중국군은 사이버전쟁에 있어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면서 “미국 정부를 비롯해 싱크 탱크, 방산업체, 외국 정부 등 전세계 전산망이 중국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사이버침입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밝혔음.

- 중국은 최근 10여종의 탄도미사일을 개발중이거나 이미 실전배치를 마쳤고 1천여기의 단거리 미사일을 대만 맞은 편에 배치했으며, 중국 주변의 다양한 급변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새로운 미사일 기지도 건설중이라고 신 차관보는 밝혔음.



[참고1] <북핵신고> 개발부터 냉각탑 폭파까지(6/26)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북한이 26일 6자회담 10.3합의에 따라 영변 원자로에서 생산한 플루토늄 양 등을 적시한 핵 신고서를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했음.

다음은 북한의 핵개발 시작부터 냉각탑 폭파에 이르기까지 주요 과정을 정리한 일지.

- ▲1953. 3 북, 소련과 원자력 평화적 이용 협정 체결
- ▲1962. 북, 영변에 원자력 연구소 설치
- ▲1963. 6 북, 소형 연구용 원자로 IRT-2000 소련으로부터 도입
- ▲1974 .9 북, 국제원자력기구(IAEA) 가입
- ▲1985.12.12 북, 핵비확산조약(NPT) 가입
- ▲1993. 3.12 북, NPT탈퇴 선언(제1차 북핵 위기)
- ▲1994. 6.13 북, IAEA 탈퇴선언문 제출
- ▲1994.10.21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문 서명
- ▲1994.11. 1 북, 핵 활동 동결 선언
- ▲1995.12.15 북-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경수로 공급 협정 체결
- ▲1997. 7.28 KEDO, 금호사무소 개설 및 부지 공사 착수
- ▲1999. 5.18~24 미, 금창리 방문단 현장 방문(핵시설과 무관 결론)
- ▲2002.10. 3~5 제임스 켈리 미 대통령 특사 방북, “북한이 우리나라 농축 시인” 주장
- ▲2002.10. 17 미 “북, 핵무기 개발 계획 추진” 발표(제2차 북핵 위기)
- ▲2002.11.14 KEDO, 대북 중유지원 중단
- ▲2002.12.12~21 북, 핵동결 해제 조치들(영변 원자로 봉인 제거 및 감시카메라 작동 중지, IAEA 사찰관 철수) 개시
- ▲2003. 1.10 북, 정부성명 통해 NPT 탈퇴
- ▲2003. 4.23~25 북·미·중, 베이징서 북핵 3자회담 개최
- ▲2003. 8.27~29 제1차 북핵 6자회담 베이징서 개최
- ▲2003.11.21 KEDO, 대북 경수로 사업 12월1일부터 1년간 중단 결정
- ▲2005. 2.10 북, 핵무기 보유 선언
- ▲2005. 5.11 북, 영변 5MW 원자로에서 폐연료봉 8천개 인출 완료 발표
- ▲2005. 9.16 미 재무부, 마카오의 방코 델타 아시아(BDA)에 대한 제재발표로 북한에 대한 간접 금융제한 단행
- ▲2005. 9.17 BDA, 북한 회사들과 업무거래 잠정 정지



- ▲2005. 9.19 제4차 2단계 6자회담에서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현
존 핵 계획의 포기 등 6개항 공동성명 채택
- ▲2005.11. 9~11 제5차 1단계 6자회담서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
동’ 원칙에 따른 공동성명 이행 의장성명 채택
- ▲2006. 1.18 북·미·중 6자회담 수석대표 베이징서 회동
- ▲2006. 3. 7 북, “선(先) 금융제제 해제”요구. 미, 기존입장 고수
- ▲2006. 6. 1 북·미, 금융문제 논의 위한 실무 접촉
- ▲2006. 6. 1 북 외무성,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 초청. 미국은
거부
- ▲2006. 7. 5 북, 대포동 2호 등 미사일 실험
- ▲2006. 7.16 유엔 안보리, 대북 미사일 결의(제1695호) 만장일치
로 처리. 북은 즉각 거부
- ▲2006. 9. 9 스튜어트 레비 미 재무부 차관, 미국기업연구소
(AEI) 주최 세미나에서 “중국 등 세계 약 24개 금
융기관이 자발적으로 대북 거래 중단” 주장
- ▲2006.10. 3 북, 핵실험 계획 발표
- ▲2006.10. 9 북, 핵실험 실시 언론 통해 발표
- ▲2006.10.15 유엔 안보리, 유엔헌장 7조 의거 대북 제재 결의
- ▲2006.10.17 북 외무성, 안보리 결의에 “미 동향 주시하며 해당
조치 취해 나갈 것” 반발
- ▲2006.12.20~22 미, 6자회담 제5차 2단계 회의에서 북에 ‘핵폐기-상
응조치’ 수정안 제시. 북은 방코 델타 아시아(BDA)
문제의 선결 원칙 고수
- ▲2007. 1.16~18 북·미, 베를린서 김계관 부상과 크리스토퍼 힐 차관
보간 양자회담서 BDA문제 해결 합의
- ▲2007. 2.13 6자회담 제5차 3단계 회의에서 비핵화 1단계 조치
인 ‘2.13 합의문’ 채택
- ▲2007. 3.13~14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 방북
- ▲2007. 3.19 북, 동결된 BDA 자금을 문제삼아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 불참
- ▲2007. 6.21~22 힐 차관보 방북. 북, 영변 원자로의 빠른 시일내 폐
쇄 의사 표명
- ▲2007. 6.25 북 외무성, BDA 동결자금의 북한 계좌로 송금 확인
- ▲2007. 6.26~30 IAEA 실무단 방북, 2.13 합의에 따른 핵시설의 폐
쇄·검증 문제 등 협의
- ▲2007. 7.15 북 외무성, 중유 5만t 도착을 확인하고 영변 핵시설
가동 중단 발표
- ▲2007. 9. 1~2 북미, 제네바서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2차 회의
열고 핵시설의 연내 불능화와 전면 신고에 합의
- ▲2007. 9.11~15 미·중·러 ‘북핵 불능화 기술팀’ 방북
- ▲2007. 9.18 북 외무성 ‘北-시리아 핵협력’ 의혹 부인



- ▲2007.10. 3 베이징 제6차 6자회담 2단계 회의서 비핵화 2단계 조치 합의
- ▲2007.11. 1~5 미 불능화팀 방북, 불능화 조치 착수
- ▲2007.11.19~20 북·미, 뉴욕서 금융실무 회의
- ▲2007.11.27~29 6자회담 당국자 등 ‘북핵 불능화 실사단’ 영변 방문
- ▲2007.12. 3~5 방북 힐 차관보,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앞 친서 전달
- ▲2008. 1. 4 북 외무성 “美에 수입알루미늄관 이용 군사시설 참관시켰다” 발표
- ▲2008. 2.19 김계관 부상-힐 차관보, 베이징 양자회담서 핵신고 논의
- ▲2008. 3.13~14 김계관 부상-힐 차관보, 제네바 양자회담서 핵신고 논의. 힐 “신고 형식엔 유연 대처”
- ▲2008. 4. 8 김계관 부상-힐 차관보, 싱가포르 회담서 핵신고서 내용 잠정 합의
- ▲2008. 5. 8~10 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 방북, 핵신고 협의 북, 영변 원자로의 가동일지를 미측에 전달
- ▲2008. 6.26 북, 플루토늄 생산량 등을 적시한 핵 신고서를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
- 미,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의 해제 절차 착수
- ▲2008. 6.27 북, 영변원자로 냉각탑 폭파. 미 CNN 등 6자회담 5개국 언론사 초청해 생중계

* 출처(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8/06/26/0511000000AKR20080625207700014.HTML>



[참고2] 부시 ‘북핵신고 관련 성명’ 전문(6/26)

(워싱턴=연합뉴스) 고승일 특파원 =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26일 오전(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에 맞춰 대북 테러지원국 명단해제 등의 내용담은 성명발표

다음은 성명 전문.

미국의 정책은 모든 핵무기로부터 자유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다. 북한 관리들이 6자회담의 일환으로 중국정부에 핵프로그램 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오늘 아침 우리는 그러한 목표에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됐다.

미국은 평양의 정권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지 않다. 우리는 여전히 북한의 인권유린, 우라늄 농축활동, 핵실험과 확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등이 한국과 이웃국가에 주는 위협을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 미국의 6자회담에서 마련된 다단계 프로세스에서 오늘 진전이 이뤄진 것을 환영한다.

지난해 북한은 핵시설을 불능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북한은 핵무기를 위한 플루토늄을 생산하는데 사용돼온 영변 핵시설을 불능화하기 시작했다. 이 작업은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관리들에 의해 감독을 받았다. 그들은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내일 전 세계의 카메라 앞에서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을 폭파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북한은 또한 핵활동을 신고하겠다고 약속했다. 오늘 신고서 제출로 북한은 플루토늄 관련 활동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이와 함께 198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핵프로그램과 관련된 기타 서류들도 제공했다.

북한은 영변의 원자로 노심과 폐기장은 물론 핵프로그램에 관여하고 있는 인력에 대한 접근도 약속했다. 이 같은 모든 정보는 북한이 핵프로그램과 그와 관련된 활동을 끝내는 지를 검증하는데 필요하다.

6자회담은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6자회담의 합의를 준수하기 위해 미국은 북한의 조치에 상응해 두 가지 조치를 취한다.

첫째로 나는 북한과 관련한 적성국교역법의 (제재) 조항 해제를 선언한다. 둘째로 나는 45일안에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하겠다는 의향을 미의회에 통보한다. 앞으로 45일간은 북한이 진정성과 협력을 보여줘야 하는 중요한 기간이 될 것이다.

우리는 6자회담을 통해 포괄적이고 엄격한 검증 프로토콜을 개발하는데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그 기간에 미국은 북한의 조치를 면밀히 주시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것이다.



미국이 취한 두 가지 조치는 북한의 경제적, 외교적 고립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로 여전히 남아있게 될 것이다. 북한이 인권유린, 2006년의 핵실험, 무기확산 등으로 직면하고 있는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며, 유엔안보리의 제재 역시 유효하다.

6자회담 프로세스는 미국과 국제사회에 몇가지 심각한 이슈를 드러냈다. 북한은 고립을 끝내기 위해 이 같은 우려를 해결해야 한다. 북한은 모든 핵시설을 해체하고 추출된 플루토늄을 포기해야 하며, 고농축 우라늄과 확산활동에 대한 질문에 답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완전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이런 활동을 종식시켜야 한다.

북한은 6자회담에서 약속한 다른 의무사항도 이행해야 한다.

미국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를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일본과 긴밀히 협력, 조율하면서 북한이 신속히 납치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다.

이는 북한에는 기회의 순간이다. 만일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계속해 나간다면 북한은 리비아가 지난 수년에 걸쳐 이뤘던 것처럼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게 된다. 만일 북한이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미국과 6자회담의 파트너들은 그에 맞춰 대응할 것이다. 만일 북한이 플루토늄과 농축, 핵확산 활동을 완전하게 밝히고, 종식시키지 않는다면 상응하는 대가가 있을 것이다.

다자 외교는 북한의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최상의 방법이다. 오늘의 진전은 견실한 다자외교가 좋은 결과를 낳는다는 점을 보여줬다. 그러나 외교적 과정이 목적 그 자체일 수는 없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명료하다. 주민들이 억압에서 자유롭고 기아와 질병에서 자유롭고 핵무기로부터 자유로운 안정되고 평화스러운 한반도다. 그런 목표를 향한 여정은 멀지만, 오늘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중요한 걸음을 내디뎠다.

* 출처(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8/06/26/0511000000AKR20080626222000071.HTML>